

민주당, 방송3법 이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처리 속도

진성준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尹 거부했던 법안 처리하는 것은민주주의·민생 되살리는 첫걸음”

野 “입법 강행 계속 밀어붙인다면협치 무너지고 극한 대치 치달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의 표결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겠다”며 “상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라며 “일반 국민 100명 이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그 중 한 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여당보다 야당이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과방위는 전날(7일)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

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과거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이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했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의 처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후,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시즌 2’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상견례에

서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여당의 배려를 당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라며 “특히 상법처럼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국민들과 함께 ‘李 정부 인사’ 검증하겠다”

‘李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유상범 필두 16개 상임위 간사로 구성 장관 후보자 도덕성·정책역량 검증

국민의힘이 다음주부터 시작될 주요 공직 후보자들 대상의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을 검증하는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에서 국민께 직접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검증키로 했다.

국민검증센터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16개 상임위원회 간사를 단원으로 꾸렸다.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이날 9시부터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개설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부도덕·불성실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막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내용이 인사청문회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엔 응하지 않고 뭉개면 된다고 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

료 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후보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부동산 투기, 편법증여, 이해충돌 등 온갖 부정과 비리로 가득하다”며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 부족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종합적 정책역량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정동영은 실패한 대북정책 책임자로서 현실정책대안이 부재하고 통일부 명칭 변경 언급 등 헌법 정신과도 괴리된 인식을 보인다. 김영훈 고

용부 후보자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다수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인사강행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주는 일주일 내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일에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에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에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회의의 주재... 조달청 보고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신설된 국가기념일로, 이날 오후 서울에서 첫 기념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며 방산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 방산전담담당관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방위산업담당관 혹은 방위산업 TF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

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으로부터 부처 보고를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백 차장은 “조달청이 (외청 중)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예산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부처가 아닌 외청까지도 보고를 직접 받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경기지사 책임 시절 개별 지자체가 구입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달 항목이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일시 구매하는 데 대해 더 합리적

인 방안은 없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싶다’고 말했다고, 그에 대해 조달청이 업무보고와 함께 여러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개선 방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 가지가 바뀌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개선안) 제안과 부작용 검토 등을 한시간 넘게 진행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말미에 국무회의 및 배석자들을 향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언론장악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경고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